

주간 통일정세

2016-40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10.2	北, 선제타격론에 분노...1차 보복에 핵도 필요없어(연합뉴스)
	10.3	北 '핵보유 당위성' 또 강변...핵은 민족부흥의 담보(연합뉴스)
	10.4	北매체 "재중동포들, 평화 기원 평양~판문점 자전거행진"(연합뉴스)
		北매체, 우주정복 활로 열것...'로켓' 발사 추진 재확인(연합뉴스)
	10.5	北김정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 선물 전달(연합뉴스)
		北 조국전선 중앙위 의장 강련학 사망...김정은 조화(연합뉴스)
		北, 황해북도 개성시에 김일성-김정일 동상 건립(연합뉴스)
10.7	北, 함북 홍수피해 유엔 지원사실 첫 발표(연합뉴스)	
	北 "美핵위협에 선제공격 방식으로 전환, 임의시각에 타격"(연합뉴스)	
경제	10.2	北 김정은 '만경대 사적지' 기념품공장 시찰(연합뉴스)
	10.2	北 수해지역 쌀값 다시 안정세...한때 2배로 급등(연합뉴스)
		日서 수입금지 북한산 송이 불법 유통...판매금 北유입 가능성(연합뉴스)
		불가리아 北대사관, 불법 외화벌이로 유럽최대규모 '성업'(연합뉴스)
		쿠웨이트서 北 치과 의사 불법 치료하다 적발(연합뉴스)
	10.5	北 광물수입 중국 큰손은 흥상 아닌 완상그룹(연합뉴스)
		北수해복구·노동당 창건일...북중 접경서 잇단 대북 물자수송(연합뉴스)
10.6	北, 식량생산량 늘었는데 인센티브 약속은 공수표(연합뉴스)	
	20년간 멈춰있던 北 청수화학공장 곧 재가동(연합뉴스)	
	북중 국제열차 외화-물품 제재 우회 반출입 경로(연합뉴스)	
10.7	北출신 홍콩사업가, 제재-수해로 北 물가-환율 50% 폭등(연합뉴스)	
사회 문화	10.4	北 평북 박천·운산 등 산골 마을서도 南 TV 시청(연합뉴스)
		대북매체, 北수해지역 식수 오염...콜레라 환자 급증(연합뉴스)
10.5	美CSIS, 北주민 상대로 설문...장사밀천 뺏겼을 때 체제에 반감(연합뉴스)	
외교 국방	10.1	北 매체, 연일 "미국 쇠퇴" 주장...제재 균열 의도(연합뉴스)
		北외무성대표단, 이란서 "통제불능 한반도정세 美 때문" 역지(연합뉴스)
		IAEA '역대최강' 북핵결의 168개국 만장일치 채택(연합뉴스)
		38노스 "北, 고래급보다 큰 잠수함 건조 추정활동 포착"(연합뉴스)
10.2	北中, 국경철 계기로 관계복원 조짐...기념식에 대사 교차참석(연합뉴스)	

10.3	제인 하먼 “美 핵·미사일 동결 목표로 北과 직접대화 나서야”(연합뉴스)
10.4	美CSIS, 美대선 전후해 북한 6차 핵실험 등 도발 가능성(연합뉴스)
	주중 러 대사, 안보리 대북 추가 결의안 논의 난항(연합뉴스)
10.5	갈루치 “美 한국과 상의없이 北에 당근 제시 말아야”(연합뉴스)
	獨외교차관, 러·중도 북핵개발 못 막아…대화의 문도 열어야(연합뉴스)
	英 주유엔대사 “안보리, 북한 제재 논의 빠르게 진행”(연합뉴스)
	IMO “北미사일, 선박항행 안전에 위협” 경고문서 회람중(연합뉴스)
10.6	北 외무성, 美 ICC 회부돼야 할 첫째 대상 비난(연합뉴스)
	세계은행, 北통치구조 세계 최하위급…작년보다 퇴보(연합뉴스)
	중견 5개국 국회의장들 ‘북핵 규탄’ 공동성명서 채택(연합뉴스)
10.7	日관방, 北 도발 가능성에 한미와 연대해 경계 강화(연합뉴스)
	38노스, 北풍계리 갱도입구서 활동…추가핵실험준비 가능성도(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6. 10. 5.

■ 北 김정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 선물 전달(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청소년 과외활동 교육기관인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 선물을 전달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5일 보도함.
- 방송은 이날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학생들의 과외교양과 궁전관리운영에 필요한 현대적인 교육설비들과 기재들을 선물로 보내시었다”고 전함.
- 선물 전달 행사는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전용남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일 열림.

2016. 10. 7.

■ 北 김정은 ‘만경대 사적지’ 기념품공장 시찰(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만경대 혁명사적지 기념품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함. 1979년 12월에 창립된 이 공장에서는 사적지 참관자들을 위한 기념품과 주민들에게 필요한 일용품을 생산하고 있음.
-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경공업공장들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 잘 꾸리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여 생산을 활성화하는 것은 날로 늘어나는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과시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함.
- 시찰에는 오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안정수 당 중앙위 경공업부장,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박명순 당 경공업부 부부장이 동행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6. 10. 5.

■ 北 조국전선 중앙위 의장 강련학 사망…김정은 조화(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의장인 강련학이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강련학의 사망 일자를 밝히지 않은 채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강련학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5일 고인의 령전(영전)에 화환을 보냈다”고 밝힘.
- 1932년생인 강련학은 제13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을 역임했고, 노동당 연락부 부부장과 평양출판사 사장,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등을 지냄.

다. 공식행사

2016. 10. 4.

■ 北매체 “재중동포들, 평화 기원 평양~판문점 자전거행진”(연합뉴스)

- 북한 매체가 4일 재중 동포들이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평양에서 판문점까지 자전거 행진을 벌였다고 보도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10.4선언 발표 9월에 즈음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중국지역 준비위원회 통일자전거행진이 4일에 진행되었다”고 전함.
- 통신은 “(모임에서는) 남조선괴뢰패당이 감행한 집단유인 납치만행의 목격자, 피해자가 발언하였다”며 “그들은 박근혜패당이 전체 조선민족 앞에, 세계양심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할 뿐 아니라 우리 처녀들을 조국의 품으로 당장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였다”고 덧붙임.

라. 주요 기관 행위

2016. 10. 5.

■ 北, 황해북도 개성시에 김일성·김정일 동상 건립(연합뉴스)

- 북한 매체가 5일 황해북도 개성시에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건립했다고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동상 제막식이 5일 진행되었다”면서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인사를 드리었다”고 밝힘.
- 동상 제막식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룡해·김기남 등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문 일꾼들, 공로자들, 인민군 장병들, 근로자들, 청년 학생들이 참가함.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6. 10. 2.

■ 北, 선제타격론에 분노...1차 보복에 핵도 필요없어(연합뉴스)

- 북한은 2일 일각에서 거론되는 대북 선제타격론과 최근 진행된 한미 양국 군의 정밀 타격훈련 등에 반발해 ‘보복대응 타격’을 거론하며 위협함.
-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이날 “호전광들의 ‘선제타격’ 기도가 현실화되는 험악한 사태는 결전상태에 진입한 우리 군대로 하여금 치솟는 증오와 보복 열기를 견잡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최고수뇌부를 ‘선제타격 대상’으로 운운해대는 천인공노할 것만으로도 군대의 분노를 더이상 억누를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실었음.
- 북한 매체들은 또 “미국 본토와 태평양 작전지대 안의 모든 침략기지들을 타격권 안에 넣고 있는 우리 군대에게 있어서 남조선과 그 주변 지역에서 벌려놓는 군사적 망동들을 제압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보다 더 쉬운 일”이라고 주장함.

2016. 10. 3.

■ 北 ‘핵보유 당위성’ 또 강변...핵은 민족부흥의 담보(연합뉴스)

- 북한이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와 함경북도 대규모 수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핵 보유의 ‘당위성’을 또 다시 강변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논평에서 “현재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각종 제재관련법과 조치들은 무려 수백가지에 달한다”며 “대조선(대북)제재와 봉쇄책동은 철두철미 우리 인민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다는데 그 비열성과 반인륜적 범죄성이 있다”고 비난함.
- 신문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끼리는 평화공존을 모색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이라며 “세계최강의 전쟁억제력인 수소탄까지 틀어쥐으로써 우리 인민은 마음 놓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함.

2016. 10. 4.

■ 北매체, 우주정복 활로 열것...‘로켓’ 발사 추진 재확인(연합뉴스)

- 북한 매체가 4일 “당이 제시한 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우리는 광활한 우주정복에로의 활로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갈 것”이라며 추가 ‘위성’(로켓) 발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함.

- 북한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은 이날 ‘광활한 만리대공이 우리의 위성을 부른다’라는 개인 필명의 글에서 “우리에게는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이 있다”며 이같이 밝힘.
- 북한은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지난달 20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참관 하에 신형 정지위성 운반로켓용 엔진 분출시험을 실시하며 추가 위성 발사를 예고한 바 있음.

2016. 10. 5.

■ **北, 함북 홍수피해 유엔 지원사실 첫 발표(연합뉴스)**

- 북한이 함경북도에서의 대규모 홍수피해에 대해 유엔이 긴급지원을 한 사실을 관영 매체를 통해 처음으로 공식 발표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함북도 북부지역이 큰물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유엔인도주의사업조정사무소와 유엔아동기금이 우리나라에 대한 긴급협조를 결정하였다”고 짧게 보도함.
- 앞서 중앙통신은 중국 정부가 함경북도 홍수피해와 관련해 북한에 물품을 기증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9일 전한 바 있으나, 유엔의 지원 사실을 보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北 “美핵위협에 선제공격 방식으로 전환, 임의시각에 타격”(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우리의 군사적 대응방식은 선제공격 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 밝힘.
- 노동신문은 이날 ‘국제적인 핵주범 미국의 정체는 감출 수 없다’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우리의 핵타격 수단들은 임의의 시각에 미국의 정수리에 무서운 불벼락을 들썩울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위협함.
- 노동신문은 논평에서 최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과 러시아 등의 기습적 핵 공격에 대비해 차세대 핵무기 개발 등 핵전력 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강하게 비난함.

2. 경제

가. 정책 동향

2016. 10. 6.

■ **北, 식량생산량 늘었는데 인센티브 약속은 공수표(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올해 식량 생산량이 늘었는데도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인 현물분배 약속은 지키지 않아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복수의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올해 감자농사(수확치)는 1정보(9천917m²)당 평균 28~30t으로 국가알곡생산 계획량(1정보당 26t)을 초과한 수준”이라며 “그러나 농민들에게 더 차례진(배당된) 몫은 없다”고 밝힘.
- 북한이 도입한 농업개혁인 분조도급제는 농업생산의 말단 조직인 분조에게 초과 생산물을 되돌려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나. 주요조치

2016. 10. 6.

■ 20년간 멈춰있던 北 청수화학공장 곧 재가동(연합뉴스)

- 북한 평안북도 압록강변에 있는 청수화학공장이 20년 이상 폐공장으로 방치됐다가 최근 새로 단장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함.
- RFA는 대북소식통들을 인용해 “청수화학공장은 19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 가동을 중단한 이래 오랜 세월 방치됐다”면서 “최근 보수공사 끝에 새로 모습을 드러낸 공장은 말끔하게 수리돼 언제라도 가동이 가능한 상태”라고 전함.
- 해방 후 북한은 이 공장의 설비를 크게 늘렸으나 고난의 행군 때 공장가동을 중단한 채 20년 넘게 방치했다고 RFA는 덧붙임.

다. 경제 상황

2016. 10. 2.

■ 北 수해지역 쌀값 다시 안정세...한때 2배로 급등(연합뉴스)

- 수해로 한때 두 배 가까이 폭등했던 북한 북부 지방의 쌀값이 안정세를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함.
- 일본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는 RFA에 지난달 30일 현재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쌀 1kg의 가격이 북한돈 4천300원, 옥수수는 1kg에 1천300원에 거래됐다고 밝힘.
- 아시아프레스 오사카(大阪)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石丸次郎) 대표는 “(쌀값이) 수해가 발생하기 직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들었다”며 “시장에 가면 쌀이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막혔던 육로와 철로 등의 복구공사가 우선으로 진행되면서 유통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말함.

2016. 10. 7.

■ **北출신 홍콩사업가, 제재·수해로 北 물가·환율 50% 폭등(연합뉴스)**

- 북한 출신 홍콩 사업가인 리옥진(李玉珍·여) 그린 리브스(Green Leaves·翠晶)발전유한공사 대표는 6일 유엔의 대북제재와 수해 여파로 북한 내 일부 생필품 물가와 환율이 50% 가까이 폭등했다고 주장함.
- 리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홍콩과 싱가포르 등 중국 본토 밖의 무역상들이 제재 이후 대북 거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설명함.
- 북한 출생 화교인 리 대표는 민생 관련한 원자재 거래 대금이 북한의 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도 있다며 무기용과 민생용 원자재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말함. 그는 중화권 언론에서 북한문제 시사평론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음.

라. 대외 경제 관계

2016. 10. 2.

■ **日서 수입금지 북한산 송이 불법 유통·판매금 北유입 가능성(연합뉴스)**

- 일본에서 지난 9월 하순부터 중국산으로 위장한 북한산 송이가 유통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일 보도함.
- 산케이는 일본 정부의 제재로 북한산은 일본 수입이 금지돼 있다며 업계 관계자를 인용, 이같이 전함.
- 신문은 “북한산 송이가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의 도매상을 경유해 일본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현지에서 중국산이라는 증명서가 첨부되고 있다”고 지적함.

■ **불가리아 北대사관, 불법 외화벌이로 유럽최대규모 '성업'(연합뉴스)**

- 불가리아 주재 북한대사관이 불법 외화벌이로 유럽 최대 북한 공관으로 '성업' 중임. 그러나 옛 공산정권 시절 '절친'인 불가리아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음.
- 2일 불가리아 외교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소피아 주재 북한대사관은 현재 대사관 부지 내 건물 1동과 이곳에서 약 500m 거리에 있는 옛 공관 건물을 민간에 불법 임대해 수익을 올리고 있음.
- 현지 교민소식통은 “북한 외교관들이 1인당 송금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불가리아와 주변 일대 국경경비가 느슨한 것을 노려 마약거래 등 기타 불법사업도 벌인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함.

■ 쿠웨이트서 北 치과의사 불법 치료하다 적발(연합뉴스)

- 북한 치과의사가 쿠웨이트에서 허가 없이 의료 행위를 하다가 지난달 28일 쿠웨이트 당국에 적발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함.
- 2일(현지시간) 쿠웨이트 일간지 등에 따르면 60세의 이 북한 치과의사는 쿠웨이트시티 외곽 국제공항 부근의 젤리브 알수유크의 한 시장에서 발치, 스케일링, 치열교정 등 치과 치료를 해 옴.
- 현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이 치과의사는 쿠웨이트의 북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의료 인력으로 파악된다”고 말함.

2016. 10. 5.

■ 北 광물수입 중국 큰손은 홍상 아닌 완상그룹(연합뉴스)

- 북한의 광물자원을 가장 많이 수입한 중국기업은 홍상(鴻祥)그룹이 아닌 완상(萬向)그룹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함.
- 중국에 있는 북한의 한 소식통은 RFA에 “홍상그룹은 북한과 거래를 하던 그리 크지 않은 기업에 불과하다”며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과 거래를 한 기업들을 조사하면 중국의 대형 기업들이 여러 개 걸려들 것”이라고 주장함.
- 이 소식통은 “중국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에 맞춰 북한으로부터 광물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중국의 기업들은 여전히 북한에서 지하자원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다”며 “대북제재는 중국의 기업들에 오히려 더 많은 이득을 주고 있다”고 덧붙임.

■ 北수해복구 노동당 창건일…북중 접경서 잇단 대북 물자수송(연합뉴스)

- 북한 함경북도의 수해복구 작업과 북한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이 겹치면서 북중접경에서 북한으로 향하는 물자수송이 잇따르고 있음.
- 5일 북중접경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중국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룡징(龍井) 부근 도로에는 함경북도 온성 방면으로 가는 대형트럭, 화물차 행렬이 이어짐.
- 북중관계에 밝은 한 소식통은 “오는 10일은 조선노동당 창건을 기념하는 북한의 쌍십절”이라면서 “최근 북한으로 향하는 물품 가운데 기념일을 맞아 주민과 공훈자에게 배급할 특별선물이 포함됐을 것”이라고 말함.

2016. 10. 6.

■ 북중 국제열차 외화·물품 제재 우회 반출입 경로(연합뉴스)

- 중국 베이징(北京)~북한 평양 간 국제열차가 국제 사회 제재를 피해 외화 및 고가물품을 불법 반입출하는 북한의 경로 구실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6일 북중접경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 8월18일 북한사람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남성이 흑곰 옹담 40개, 3천여g에 이르는 물량을 몰래 가지고 중국으로 입국하다가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해관(세관) 여객 검사구의 승객 소지품 검사에서 적발됨.
- 접경 지역 한 소식통은 “옹담밀수 미수건과 미화반입 미수건의 공통점은 베이징~평양 간 국제열차를 이용해 돈과 물품을 몰래 반출하려던 것”이라며 “대북 제재 이후 공식 경로가 막히면서 북한 측이 우회 경로를 확보하려는 필사적인 모습이 나왔다”고 말함.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6. 10. 4.

■ 北 평북 박천·운산 등 산골 마을서도 南 TV 시청(연합뉴스)

- 북한의 일부 해안과 도시 지역에 나오던 남한 TV가 평안북도 박천과 운산 등 산골 마을의 안방까지 송출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함.
- 최근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김 씨는 “평안북도 박천군과 운산군 사람들도 한국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면서 “인민군 군관 가족들이 거리낌 없이 한국 TV를 틀어놓고 보고 있었다”고 RFA에 밝힘.
- 익명의 정보통신 기술자는 “한국에서 NTSC 방식을 북한에서 사용하는 PAL 방식으로

변환시켜 송출하면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다”면서 “이렇게 변환시켜 송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말함.

■ **대북매체, 北수해지역 식수 오염…콜레라 환자 급증(연합뉴스)**

- 최근 북한 함경북도 수해지역에서 오염된 식수 사용으로 콜레라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대북매체인 자유북한방송이 4일 보도함.
- 이 매체의 양강도 통신원은 “양강도 혜산시 혜명동과 함경북도 무산, 온성 지역의 주민 및 북구대원(인부)들 속에서 오염된 식수로 인해 대장염과 콜레라 등 급성설사증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함.
- 앞서 평양주재 유엔 상주조정관실은 홍수피해를 본 함경북도의 6개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와 설사·급성 호흡기질병 치료약 등 여러 분야를 지원하는데 2천820만 달러(약 316억 원)가 필요하다며 국제사회를 상대로 모금에 나섰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지난달 20일 보도한 바 있음.

2016. 10. 5.

■ **美CSIS, 北주민 상대로 설문…장사밀천 뺏겼을 때 체제에 반감(연합뉴스)**

- 현재 북한에서 사는 주민들이 배급제도 붕괴, 경제활동 규제 등 북한 체제와 실상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은 설문조사 결과가 나옴.
- 감시와 통제가 엄격한 북한의 실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이뤄져 결과가 공개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임.
- CSIS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이번 조사는 북한 내부에서 여러 차례 설문조사를 한 경험이 있는 단체에 위탁해 이뤄졌으며, 탈북자를 상대로 한 기존 설문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지만, 북한 주민의 입을 통해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함.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6. 10. 1.

■ **北 매체, 연일 “미국 쇠퇴” 주장…제재 균열 의도(연합뉴스)**

- 북한이 연일 미국과 한반도 주변 국가간 갈등을 부각하며 미국의 “쇠퇴”를 주장하고 있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30일 ‘월간국제정세개관’ 코너에서 “9월에 다른 열강들과 미국 사이의 갈등과 모순이 더욱 격화되었다”면서 “미국은 나날이 쇠퇴 몰락하고 있다”고 밝힘.
-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변 강대국간 갈등을 부추김으로써 자신을 향한 제재 압력을 분산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북한의 전략을 보여준다”고 분석함.

■ 北외무성대표단, 이란서 “통제불능 한반도정세 美 때문” 억지(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의 긴장된 한반도 정세가 미국 때문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
- 최희철 아시아 및 오세안주 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외무성 대표단은 지난달 26~30일 이란을 방문해 에브라힘 라힘푸르 이란 외교부 부장관과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북한 측은 “현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통제불능상태에로 벗어나서 나가고 있는 근원이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對) 조선 적대시 정책에 있다”고 주장함.

2016. 10. 3.

■ 제인 하먼 “美, 핵·미사일 동결 목표로 北과 직접대화 나서야”(연합뉴스)

-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는 일단 장기적 목표로 두고, 북한의 핵·장거리미사일 실험 동결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북한 복귀를 ‘당면목표’로 삼아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미 정책연구기관 우드로윌슨센터의 제인 하먼 소장 등이 제안함.
- 하먼 소장과 이 연구기관의 제임스 퍼슨 한국역사·공공정책센터 소장은 2일자(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기고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현실적으로 이것은 평양과 베이징 간을 비롯한 6자회담 주요 당사국 간에 너무 많은 불신을 낳은 6자 프로세스로의 복귀가 아니라, 북한과의 직접협상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함.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지 6개월이 됐지만, 북한이 여전히 도전적 자세를 보인다고 지적한 하먼 등은 “B-1 폭격기를 비무장지대 주변으로 보내거나, 함정이나 잠수함을 북한 해안 부근으로 보내는 일은 북한을 더 반항적으로 만들 뿐”이라고 말함.

2016. 10. 4.

■ **美CSIS, 美대선 전후해 북한 6차 핵실험 등 도발 가능성(연합뉴스)**

- 북한이 오는 11월 8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밝힘.
- 3일(현지시간) 미국 CNN에 따르면 CSIS는 이번 주 발간할 보고서에서 지난 60년간의 북한 행동 패턴을 분석해 “북한 지도자들은 미국 선거 즈음해 긴장을 고조시키려 시도 해왔다”며 특히 최근 몇 년간 그런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함.
- 실제로 북한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미사일과 핵 실험을 감행한 바 있음.

2016. 10. 5.

■ **갈루치 “美, 한국과 상의없이 北에 당근 제시 말아야”(연합뉴스)**

- 설사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협상에 들어간다 해도 미국은 사전에 한국과 상의하지 않고 북한에 당근을 제시하는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가 지적함.
- 갈루치 전 특사는 4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과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동북아시아 지역문제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이 가장 진정으로 원하는 ‘당근’은 “한미합동군사연습”이라고 말한 뒤 이같이 충고함.
- 갈루치 전 특사는 “이것은 차기 미국 행정부에 내가 조언하는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의 본질을 건드리는 당근을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도록 매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함.

2016. 10. 6.

■ **北 외무성, 美 ICC 회부되어야 할 첫째 대상 비난(연합뉴스)**

- 북한은 6일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를 거론하면서 “미국이야말로 국제형 사재판소(ICC)에 회부되어야 할 첫째가는 대상”이라고 비난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최근 오바마 패(당)의 대(對) 조선(대북) 제재 압박 소동이 극한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오바마는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걸고 들면서 전략자산들을 우리 코앞에 들이밀어 군사적으로 위협 공갈하고 있으며 우리 체제의 ‘붕괴’를 꾀한다는 것까지 숨기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나. 북·중 관계

2016. 10. 2.

■ 北中, 국경절 계기로 관계복원 조짐...기념식에 대사 교차참석(연합뉴스)

- 중국의 건국 67주년 기념일(국경절)을 맞아 북한과 중국이 잇따라 기념행사를 열면서 5차 핵실험 이후 냉각된 양국관계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임.
- 양국은 평양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중국의 국경절 기념행사에 자국 대사를 교차 참석시켰고 평양에서는 이례적으로 기념행사가 2건 열린 것으로 확인됨.
- 일각에서는 북중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미국이 북한과의 외교 및 경제관계를 단절하거나 격하해 달라고 각국에 요청함에 따라 이를 일축하면서 미국 측의 압박에도 양국관계를 지속하겠다는 메시지를 피력한 것이란 해석도 나옴.

다. 북·일 관계

2016. 10. 7.

■ 日관방, 北 도발 가능성에 한미와 연대해 경계 강화(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7일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인 오는 10일을 전후해 핵실험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중대한 관심을 갖고 한미와 긴밀히 연대해 정보 수집 및 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함.
- 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나라 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힘.
- 한편 스가 장관은 북한과 일본 당국자가 지난달 3~4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 시내에서 접촉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논의했다는 아사히(朝日)신문의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함.

라. 북·러 관계

2016. 10. 4.

■ 주중 러 대사, 안보리 대북 추가 결의안 논의 난항(연합뉴스)

-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고 중국 주재 러시아 대사가 4일(현지시간) 밝힘.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안드레이 테니소프 주중 러시아 대사는 이날 베이징에서 자국 기자들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소개함.
- 그는 “우리는 결의안에 직접 이해관계가 걸린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든 결의안 준비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안보리 회원국 모두가 그러한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내가 아는 한 안보리에서 아직 (결의안 도출을 위한) 공동 작업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것 같지는 않다”고 전함.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6. 10. 1.

■ IAEA '역대최강' 북핵결의 168개국 만장일치 채택(연합뉴스)

- 유엔 산하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역대 가장 강도높은 표현의 북핵 규탄 결의를 168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함. IAEA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끝난 제60차 총회에서 이같이 결의를 채택했다고 외교부가 1일 밝힘.
- 결의는 지난달 9일의 핵실험을 포함, 이제까지 5차례 진행된 북한의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외교부는 또 윤병세 장관이 지난달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까지 거론해가며 북한 핵개발의 중대성을 지적했다고 소개하면서 “우리의 단호한 의지가 이번에 강력한 결의 문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임.

2016. 10. 5.

■ 獨외교차관, 러·중도 북핵개발 못 막아...대화의 문도 열어둬야(연합뉴스)

- 마르쿠스 에더러 독일 외교부 차관은 4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는 나라는 없다”면서 “러시아와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함.
- 에더러 차관은 이날 베를린에서 한국의 통일부 주도 아래 열린 제7회 한반도 국제포럼 연설을 통해 이러한 견해를 밝혔다고 포럼에 참석한 한 관계자가 전함.
- 에더러 차관은 “이웃 국가들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원하고, 북한은 핵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 포기가 쉽지 않다고도 평가함.

■ 英 주유엔대사 “안보리, 북한 제재 논의 빠르게 진행”(연합뉴스)

-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제재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빠르게 움직이고

- 있다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유엔주재 대사가 4일(현지시간) 밝혔.
- 매튜 라이크로프트 대사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해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려고 안보리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dpa 등이 보도함.
 -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달 9일 5차 핵실험을 한 직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이 (핵실험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며 ‘의미있는 추가 제재’를 하겠다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발표함.

■ IMO “北미사일, 선박항행 안전에 위협” 경고문서 회람중(연합뉴스)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GPS(위치정보시스템) 교란행위가 선박항행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담은 문서가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유엔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이 추진되고 있음.
- 정부는 내달 하순 열리는 IMO 해사안전위원회(MSC) 회의를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제출했고, 현재 현재 회원국들이 문서를 회람 중임.
- 앞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29일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유엔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에 모든 나라가 동참하도록 유엔과 동아시아정상회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MO 등을 포함한 다자 무대에서 3국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음.

2016. 10. 6.

■ 세계은행, 北통치구조 세계 최하위급…작년보다 퇴보(연합뉴스)

- 북한의 통치구조를 세계 최하위급으로 평가한 세계은행(WB)의 자료가 나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함.
- 세계은행은 30여 개 국제기구와 감시단체가 세계 230개국의 정부 통치와 법치, 청렴도를 평가한 자료를 종합한 ‘진 세계 통치구조 지수(World Governance Indicators 2016)’를 최근 발표함.
- 자료에서 북한은 내란이나 폭력사태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치적 안정성’을 제외한 규제 의 공평성과 행정 능력, 언론 자유, 부패통제, 법치 등 세계은행이 평가한 6개 항목 중 5개에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됨.

■ 중견 5개국 국회의장들 ‘북핵 규탄’ 공동성명서 채택(연합뉴스)

- 한국, 호주, 멕시코, 터키, 인도네시아 등 중견 5개국 협의체 ‘믹타(MIKTA)’의 국회의장

- 들은 6일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채택함.
-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5개국 의회 수장들은 이날 호주 태즈메이니아주 호바트시에 서 열린 제2차 미타 국회의장 회의 성명서에서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해 국제 사회에서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도록 촉구한 미타 외교 장관들의 지난달 22일 공동 성명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밝힘.
 - 성명서 초안에는 북핵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정 의장 등 한국 대표단이 나머지 4개국을 설득해 북핵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고 호주의 한 외교 소식통은 연합뉴스에 전함.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6. 10. 1.

■ 38노스 “北, 고래급보다 큰 잠수함 건조 추정활동 포착”(연합뉴스)

-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여러 발 연속 발사할 수 있는 크기의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활동이 포착됨.
-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30일(현지시간) 디지털글로벌의 상업용 인공위성이 지난 24일 촬영한 사진을 판독한 결과,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이동식 대형 크레인 옆에 직경 10m에 달하는 원형 자재가 등장했다고 밝힘.
- 다만 38노스는 신포조선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활동이 SLBM 발사용 잠수함 건조와 관련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덧붙임.

2016. 10. 7.

■ 38노스, 北풍계리 갯도입구서 활동…추가핵실험준비 가능성도(연합뉴스)

-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 갯도 입구 세 곳 모두에서 움직임이 관측됐으며, 이중 북쪽과 남쪽 갯도 입구에서의 활동은 추가 핵실험을 위한 준비와 관련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6일(이하 현지시간) 밝힘.
- 38노스는 지난 1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이전 사진들과 비교한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의 북쪽 갯도 입구 부근에서 “트럭으로 추정되는 큰 물체”와 “입구 건물 옆의 건축자재나 상자들로 보이는 물체들”이 새로 발견됐다고 설명함.
- 풍계리 핵실험장의 북쪽 갯도는 5차 핵실험이 진행된 곳이고, 북쪽 갯도 입구를 통해 몇 개의 갯도가 건설됐는지는 불분명함.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10.1	한미 공군, 北핵시설 정밀타격 훈련한다...‘레드 플래그’ 돌입(연합뉴스)	
	10.2	북한 군사협박 효율적 대응 위해 한미일 3각 동맹 필요(연합뉴스)	
	10.4	美해병대 백령도·연평도서 한미 합동훈련...北도발 대비(연합뉴스)	
	10.5		유엔주재 미국대사 8일 방한...대북제재 협의(연합뉴스)
	10.6	정부, 美일각의 대북선제 타격론에 입장 표명 유보(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10.1		中관영매체 사드 최종부지 확정 비판 계속(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10.4	오준 유엔대사 “한일 위안부합의, 국제 논의에 직접적 영향 안줘”(연합뉴스) 한일 합의이행 노력에 찬물...정부, 아베 편지지부에 ‘곤혹’(연합뉴스)	
	10.5	이준규 주일 대사, 한일관계 회복 기 조...위안부 합의 충실 이행(연합뉴스) <국감현장> ‘위안부 합의 집중거론... 아베 ‘털끝’ 발언도 문제시(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10.2	美 中에 대북 통제 강화 요구할수록 역효과 커질 것(연합뉴스)	
	10.3	안보리 결의 '신속채택'은 언제?...미중 여전히 물밑서 기싸움(연합뉴스)	
	10.5	美·中, 대북 에너지 거래 제한 방안 논의 중(연합뉴스)	
	10.7	美 이란식 대북제재책 내부승인...대중 관계 놓고 단행 저울질중(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10.4		日, 러시아 크림반도 합병후 '영토협상 분리대응' 美에 전달(연합뉴스)
	10.5		日방위상, 美태평양사령관과 "對北 대응 긴밀 협력"(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10.4	미러 시리아사태 협의 중단...민간인 참사 속 책임공방(연합뉴스)	
	10.4	케리, 러와 협상 중단했지만 시리아 평화정착 방안 포기 안 해(연합뉴스)	마·러, 시리아 사태 최악 대립...러 군사 대응 움직임(연합뉴스)
	10.4		러, 순항미사일 탑재 군함 추가 파견...마·러 시리아 긴장 고조(연합뉴스)
	10.5		러, 자국 방문 美외교관 2명 미약 탄 음료로 의식 잃게 해(연합뉴스)
	10.5		러시아, 美와 원자력 분야 협력 협정 중단 선언(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10.3		일본, 영유권분쟁 센카쿠열도 인근 경비인력·장비 4배 증강(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10.1	日, 러 북방영토 맞바꿀 대규모 경제협력...“635천억원 사업도”(연합뉴스)	
	10.2	아베, 러일 평화조약 체결 통해 관계 발전시키야(연합뉴스)	
	10.3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철도 日호카이도까지 연장 제안(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6. 10. 1.

■ 한미 공군, 北핵시설 정밀타격 훈련한다…‘레드 플래그’ 돌입(연합뉴스)

-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6대가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공군훈련인 ‘레드 플래그 (Red Flag)’에 참가하기 위해 출격함.
- ‘레드 플래그’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전투기가 북한의 핵시설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집무실 등 핵심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이 실시될 것으로 알려짐.
-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주관해 1976년 시작된 ‘레드 플래그’는 과거엔 전투기나 방공망이 없는 무장세력을 상대로 제공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벌이는 전투를 상정해 진행됐지만, 10여 년 전부터는 지대공 미사일 등 방공망을 갖춘 적과 싸우는 시나리오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짐. 한국은 지난 2013년부터 전투기를 동원해 훈련에 참가하고 있음.

2016. 10. 2.

■ 북한 군사협박 효율적 대응 위해 한미일 3각 동맹 필요(연합뉴스)

- 북한의 군사적 협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간 3각 동맹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 한국 관련 서적 여러 권을 출간한 전문가인 도널드 커크 기고가는 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칼럼에서 미국 외교관들이 북한에 맞선 방위를 위해 협조함으로써 쓰러린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를 보자고 한국과 일본에 종종 요구했지만, 한일 간 반감의 깊이와 복잡함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주장함.
- 커크는 “북한이 강력한 한미일 3각 동맹에 직면한다면 얼마다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지를 생각해 보라”며 “북한 전략가들이 한국과 일본 사이를 이간질하기를 원하겠지만, 한일 동맹이 이를 무위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함.

2016. 10. 4.

■ 美해병대 백령도·연평도서 한미 합동훈련…北도발 대비(연합뉴스)

-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서해 최전방 서북도서에서 미 해병대 병력이

우리 군과 함께 증원훈련을 진행 중임.

- 해병대사령부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주일 미 제3해병기동군 소속 장병들이 서해 최전방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북한의 도발 상황을 가정한 전술훈련과 항공기 유도 훈련을 하고 있다”고 4일 밝힘.
- 해병대사령부는 “한미 해병대는 서북도서에 대한 북한의 도발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훈련을 통해 북한의 다양한 도발 위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서북도서에서 한미 연합작전 수행 태세를 실전적으로 점검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함.

2016. 10. 5.

■ 유엔주재 미국대사 8일 방한…대북제재 협의(연합뉴스)

-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8일부터 11일까지 일정으로 방한, 우리 정부 당국자들과 북한의 5차 핵실험(9월 9일)에 대한 제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외교 소식통이 5일 밝힘.
- 소식통에 따르면 파워 대사는 방한 기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외교 라인의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결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뉴욕의 유엔 본부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방한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며 파워 대사 개인으로는 이번이 처음임.

2016. 10. 6.

■ 정부, 美일각의 대북선제 타격론에 입장표명 유보(연합뉴스)

- 미국 일각에서 제기된 대북 선제 타격론에 대해 정부가 ‘용인’도 ‘반대’도 아닌 모호한 입장을 밝힘.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북한 핵공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이 최근 미국 부통령 후보간 토론에서 거론된 데 대해 “진행 중인 선거 과정에서 나온 언급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코멘트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심각성과 엄중성에 대한 미국 내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 조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헌법상 한국 영토인 북한에 대한 미국발 선제타격론에 대해 명확히 ‘안 된다’고 잘라 말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음.

나. 한·중 관계

2016. 10. 1.

■ 中관영매체 사드 최종부지 확정 비판 계속(연합뉴스)

- 지난달 30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최종 부지 확정 발표 이후 중국 관영언론이 비판을 이어가고 있음.
- 관영 신화통신이 전날 비판적인 논평을 발표한 데 이어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도 1일자 3면에 게재한 사설 성격의 종성(鐘聲) 칼럼을 통해 “한미의 사드 배치는 한반도 안보문제의 긴장국면을 완화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이 지역 국가의 전략적안보이익을 엄중히 훼손했다”고 비판함.
- 신문은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의 행동 역시 결연할 것”이라며 “세계 각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핵심이익과 관련 있는 안보문제에는 소홀하지도 무관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다. 한·일 관계

2016. 10. 4.

■ 오준 유엔대사 “한일 위안부합의, 국제논의에 직접적 영향 안줘”(연합뉴스)

-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3일(현지시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 간 양자적 문제로 종식된 것이지, 국제적 문제로서 위안부 문제가 종식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함.
- 오 대사는 이날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작년 12월 한일 정부 간의 위안부 문제 합의를 “피해자의 입장이 빠진 잘못된 협상”으로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함.
- 오 대사는 “우리는 한일 간 외교 문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의지로 합의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한일 양자 간의 외교 현안으로서의 위안부 문제가 종결된 것”이라고 말함.

■ 한일 합의이행 노력에 찬물…정부, 아베 편지거부에 ‘곤혹’(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 편지 발송을 단호하게 거부하자 한국 정부는 곤혹스러운 반응을 보임.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사죄 편지 거부에 대한 논평

을 요구받자 “아베 총리의 구체적 발언, 특히 구체적 표현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자 한다”고 밝힘.

- 아베 총리는 3일 자국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한일간 위안부 문제 합의에 추가해 일본측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사죄 편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느냐는 민진당 오가와 준야(小川淳也) 의원의 질의에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함.

2016. 10. 5.

■ 이준규 주일 대사, 한일관계 회복 기초…위안부 합의 충실 이행(연합뉴스)

- 이준규 주일 한국대사는 5일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난 몇 년간 어려운 국면에 놓여있었던 한일관계가 회복 기초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함.
- 이 대사는 이날 도쿄에서 진행된 주일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감 업무현황 보고에서 “작년 11월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이어 12월 위안부 합의 등을 계기로 이같이 평가된다”고 밝힘.
- 그는 특히 “작년 말 양국간 오랜 현안이 되어 온 위안부 문제 협의와 관련해 한일 정부는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가고 있다”고 말함.

■ <국감현장> ‘위안부 합의’ 집중거론…아베 ‘털끝’ 발언도 문제시(연합뉴스)

-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5일 주일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말 이뤄진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이행 과정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됨.
-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병석 의원은 “위안부 합의를 추가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인 한국이 일본에 한없이 작아지고 당당하지 못한 자세를 보였다”고 지적한 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피해자에게 보내는) 사죄편지에 대해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발언은 부적절했으며 최소한의 품격도 갖추지 못했다”고 말함.
-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지난해 어렵게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에 대해 역사적으로 큰 결단을 내렸고 이에 대해 긍정적 평가도, 반대하는 분도 있다”며 “그러나 아베 총리가 사죄편지에 대해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발언은 비늘로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아팠다”고 말함.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6. 10. 2.

■ 美, 中에 대북 통제 강화 요구할수록 역효과 커질 것(연합뉴스)

- 미국이 중국에 대(對)북한 통제를 강화하라고 요구할수록 역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 차우충안(周松欣)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집행 편집장은 2일 칼럼에서 중국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요구하는 미국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자신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더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함.
- 차우 편집장은 중국이 종종 북한에 특별한 영향력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 내 중국파들이 김 위원장에게 숙청됐기 때문에 일부 사실이지만, 중국 지도자들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 국수주의적인 김 위원장과 더 멀어질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다”고 설명함.

2016. 10. 3.

■ 안보리 결의 ‘신속채택’은 언제?...미중 여전히 물밑서 기싸움(연합뉴스)

- 지난달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 논의가 기대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
- 3일 기준으로 엿새 뒤면 북한의 5차 핵실험 한 달을 맞지만, 핵심 당사국인 미중간의 논의 진전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음.
- 외교 소식통은 “미중간에 큰 틀에서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함. 다른 소식통은 “미중이 어떤 것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주고받고 있다”면서 “아직 초안이나 문안을 만드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함.

2016. 10. 5.

■ 美·中, 대북 에너지 거래 제한 방안 논의 중(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 후속조치로 북한에 대한 에너지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 보도함.

- 블룸버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외교관 4명의 말을 종합해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석탄, 철강, 원유 등 에너지 무역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함.
- 중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 블룸버그에 보낸 성명에서 “적절한 당사자와 북한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안보리가 한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와 안정성을 유지 하도록 더 심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함.

2016. 10. 7.

■ **美, 이란식 대북제재책 내부승인...대중관계 놓고 단행 저울질중(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북한에 이란식 제재 정책들을 이미 마련해뒀으나 이들 조치가 결국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 심각한 관계악화를 무릅쓰고 단행할 것이냐를 두고 내부 격론을 벌이고 있다고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 매체 포린 폴리시가 6일(현지시간) 보도함.
- 미 관리들은 “이미 승인됐으나 실전 배치되지 않은” 강력한 경제제재 조치들이 이란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봉쇄했던 ‘세컨더리 제재(secondary sanctions)’와 유사하다고 포린 폴리시에 밝힘.
- 그러나 이를 실행하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은행 및 기업들을 잡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 심각한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일부 백악관 관리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함.

나. 미·일 관계

2016. 10. 4.

■ **日, 러시아 크림반도 합병후 ‘영토협상 분리대응’ 美에 전달(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직후 대러 제재와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협상을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전함.
- 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직후 사이키 아키타카(齋木 暁隆) 당시 외무성 사무차관을 미국 워싱턴에 파견함.
-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는 푸틴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영토문제 협상에서 큰 진전을 끌어내려 한다”며 “그러나 미국에서도 국무부를 중심으로 러일간 접근에 대한 우려는 강하다”고 전함.

2016. 10. 5.

■ **日방위상, 美태평양사령관과 “對北 대응 긴밀 협력”(연합뉴스)**

-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일본 방위상은 5일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관과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지난 8월 취임한 이나다 방위상은 이날 방위성에서 해리스 사령관을 처음 만나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고 통신은 전함.
- 이나다 방위상은 해리스 사령관에게 “미·일 신뢰관계가 매우 강력해졌다”며 “미군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함.

다. 미·러 관계

2016. 10. 4.

■ **미러 시리아사태 협의 중단…민간인 참사 속 책임공방(연합뉴스)**

-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휴전, 군사협력 논의가 3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중단됨.
- 미국은 러시아가 아사드 정권을 통제하지 못하고 민간인을 겨냥한 공습을 지원했다고 비난했고, 러시아는 미국이 온건 반군과 알카에다와 연계된 지하디스트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맞섬.
-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중단한다”면서 “이는 결코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니다”고 밝힘.

■ **케리, 러와 협상 중단했지만 시리아 평화정책 방안 포기 안 해(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4일 시리아 사태와 관련, 미국은 러시아와 휴전협정을 중단했지만, 시리아에서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아프가니스탄 지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브뤼셀을 방문 중인 케리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가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반군과 민간인들에게 염소가스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눈감아 주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언론들이 전함.
- 케리 장관은 “우리는 시리아 국민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고, 평화 추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유엔 등을 통해) 이(시리아) 전쟁을 끝내기 위한 길을 찾는 것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마러, 시리아 사태 최악 대립...러 군사대응 움직임(연합뉴스)

- 미국이 러시아와 시리아 사태 협상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러시아가 강경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시리아 휴전’을 재개하기 위한 러시아와의 협상을 중단한다면서 “이는 결코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니다”고 밝힘.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 시리아 휴전 파기와 협상 중단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며 비난전을 벌이고 있음.
- 이런 와중에 러시아는 군사적 대응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음. 러시아 의회 소식통은 이날 하원이 이번 주 안에 러시아 공군의 시리아 영구 주둔 협정을 비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협상 중단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될 것이라고 자국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밝힘.

2016. 10. 5.

■ 러, 순항미사일 탑재 군함 추가 파견...마러 시리아 긴장 고조(연합뉴스)

- 시리아 내전 사태가 악화하면서 미국과 러시아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러시아가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군함들을 시리아 인근 지중해로 추가 배치한 것으로 알려짐.
- 인테르팍스 통신은 순항미사일 ‘칼리브르’로 무장한 러시아 흑해함대 소속 소형 미사일 함 ‘세르푸호프’와 ‘질로니 돌’ 등 2척이 5일(현지시간) 흑해에서 지중해로 진입했다고 전함.
- 통신은 터키 언론을 인용해 군함들이 전날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항을 출발해 지중해 동부 시리아 인근 해역으로 향하고 있다고 소개함.

■ 러, 자국 방문 美외교관 2명 마약 탄 음료로 의식 잃게 해(연합뉴스)

- 러시아가 국제회의 참석차 자국을 방문한 미국 외교관 2명에게 몰래 마약을 넣은 음료로 의식을 잃게 해 미 정부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 5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 등 영국 언론들은 ‘라디오 프리 유럽’ 보도를 인용해 작년 11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유엔 반부패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미 정부 대표단 일행 중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2명이 자신도 모르게 마약을 탄 음료를 마셨다고 보도함. 이들이 묵고 있던 호텔의 바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됨.
- 엘리자베스 케네디 미 국무부 대변인은 “모스크바 주재 미국 외교관들에 대한 괴롭히기와 감시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말함.

2016. 10. 6.

■ **러시아, 美와 원자력 분야 협력 협정 중단 선언(연합뉴스)**

- 러시아가 미국과의 원자력 분야 협력 협정을 잠정 중단한다고 5일(현지시간) 밝힘.
- 미국과 체결한 무기급 플루토늄 폐기 협정 잠정 중단을 선언한 지 사흘만임.
- 러시아 총리 공보실에 따르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가 이날 미국과의 ‘원자력·에너지 분야 연구 및 개발 협력 협정’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총리령에 서명함.

라. 중·일 관계

2016. 10. 3.

■ **일본, 영유권분쟁 센카쿠열도 인근 경비인력·장비 4배 증강(연합뉴스)**

-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두고 양국의 신경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일대 경비 강화에 나섬.
- 3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센카쿠 열도 인근 섬인 미야코지마(宮古島)를 거점으로 하는 미야코지마해상보안서(署)를 해상보안부(部)로 1일 승격함.
- 또 미야코지마해상보안부에 배치된 인력과 장비를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증강함.

마.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일·러 관계

2016. 10. 1.

■ **日, 러 북방영토 맞바꿀 대규모 경제협력...“6조5천억원 사업도”(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이 있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협상을 위해 대규모 경제협력을 추진함.
- 니혼게이지신문은 일본이 양국간 경제협력 규모로는 이례적으로 1개 사업에 6천억엔(약 6조5천억원)에 이르는 협력사업을 포함해 의료, 우편 등 생활 전반에 걸친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보도함.

- 일본은 12월 15일 야마구치(山口)현에서 열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러한 내용을 합의하고 북방영토 반환에 대해서도 일정한 성과를 낸다는 계획임.

2016. 10. 2.

■ 아베, 러일 평화조약 체결 통해 관계 발전시키자(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일 아르카디 드보르코비치 러시아 부총리에게 평화 조약체결을 통해 러일관계를 발전시키자고 말함.
- 교토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일본을 방문 중인 드보르코비치 부총리와 교토(京都)에서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일본 방문 기간 평화조약 체결을 포함해 폭넓은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싶다”며 이같이 밝힘.
- 이에 대해 드보르코비치 부총리는 “(러일간) 협력 플랜의 구체화를 포함해 푸틴 대통령의 방일을 위해 정력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양국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함.

2016. 10. 3.

■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철도 日 홋카이도까지 연장 제안(연합뉴스)

- 러시아 정부가 일본 정부에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일본 홋카이도(北海道)까지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3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일본과 러시아의 영유권분쟁 지역인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협상과 맞물린 경제협력 구상과 관련해 이같이 요구함.
- 이는 대륙에서 사할린을 잇는 타타르 해협(마이야<間宮>해협) 구간 약 7km와 사할린에서 홋카이도를 잇는 소야(宗谷)해협 약 42km 구간에 다리 또는 터널을 건설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홋카이도까지 연결하는 계획임.

■ 아베, '쿠릴섬 4개 귀속' 변함없다..對러 협상에 미국도 양해(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일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와 관련해 “4개섬의 (일본) 귀속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함.
- 그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일각에서 2개섬 반환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이 나오고 있다”는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민진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함.

-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일본과 러시아 양국의 미래에 있어서 올바른 것이다”라고 강조함.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북한인권 국제동향	10.2	유럽탈북자단체 “김정은, ICC 회부해야”...北인권탄압 사진전(연합뉴스)
	10.3	전 세계인 대상 北인권탄압 김정은 ICC 회부 인터넷 청원운동(연합뉴스)
	10.5	현대판 노예노동하는 北 돌격대, 40만명 추산(연합뉴스)
		日외무성, 주중 북한대표부 간부 일본 망명 요청 없었다(연합뉴스)
		미 NGO, 북한 인권 개선에 탈북자 증언 중요(연합뉴스)
	10.6	美 민간단체 “北 영아 산모 사망률, 한국의 8배”(연합뉴스)
		美하원 ‘북한인권법 5년 연장안’ 발의(연합뉴스)
		[단독]英정부 보고서에 ‘北 인권범죄 자행’ 적시...北 인권 압박(연합뉴스)
	10.7	독 NGO, 유엔 COI보고서 독일어 번역(자유아시아방송)
		미 의회보고서 “중국 내 북한인 노예노동”...북 해외노동자 인권 첫 언급(미국의소리)
북한인권 내부동향		탈북화가 송벽, 美의회서 北정권실상 비판 작품전시(연합뉴스)
북한인권 남한동향	10.3	북한인권법 시행 한 달...北인권재단은 출범도 못해(연합뉴스)
		통일부, 제3국 일시체류 北주민도 북한인권법 적용대상(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문조사	10.5	靑, 北 간부 탈북 보도에 크게 주목한다(연합뉴스)
	10.5	대북소식통, 베이징 주재 北 대표부 간부 탈북(연합뉴스)
대북지원	10.1	2016 회계연도 미국 입국 탈북난민 14명...2006년 이후 총 200명(미국의소리)
	10.7	아사히 “北日 당국자, 5차 핵실험 직전 중국서 납북일본인 논의”(연합뉴스)
	10.1	유엔, 대북수해지원금 추가 편성...총액 48억원(연합뉴스)
	10.4	민간단체, 北 수해지역에 구호물자 추가 지원(연합뉴스)
	10.5	덴마크, 북한 수해 복구 사업에 10만 달러 지원(미국의소리)
10.6	주북 이세안위원회, 홍수피해 지역 지원금 전달(연합뉴스)	
10.7	스위스, 北 수해복구에 40억원 지원...단일국가 최대(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6. 10. 2.

■ 유럽탈북자단체 “김정은, ICC 회부해야”…北인권탄압 사진전(연합뉴스)

- 유럽에 거주하는 탈북자 단체 ‘재유럽조선인총연합회(이하 유럽총연·회장 장만석)’는 벨기에의 나무르에서 1, 2일 이틀간 열리는 아시아 문화 축제 ‘메이드 인 아시아(Made in Asia)’에 참여해 북한 인권탄압 실상을 폭로하는 사진전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 유럽총연은 사진전을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5차 핵실험 등 무력도발과 인권유린을 일삼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고발하고 EU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강력한 추가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배포함.
- 유럽총연은 성명서에서 지난달 13일부터 유엔에서 총회가 열리고 있음을 지적한 뒤 “이번 유엔총회에서 5차 핵실험 강력규탄 및 김정은 정권 축출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면서 “인권을 탄압하는 반인도범죄자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함.

2016. 10. 3.

■ 전 세계인 대상 北인권탄압 김정은 ICC 회부 인터넷 청원운동(연합뉴스)

- 북한의 최고 통치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북한 인권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요청하는 국제청원운동이 온라인에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유엔의 활동을 감시하면서 인권증진을 위해 일하는 유럽의 비정부기구(NGO)인 ‘유엔 워치’(UN Watch)는 지난 달 16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청원운동을 개시해 2일 오후(스위스 제네바 시간 기준)까지 959명이 서명했다고 브뤼셀의 북한인권단체 관계자가 밝혔다.
- 유엔 워치는 최근 국제적인 청원운동 홈페이지인 ‘www.change.org’를 통해서도 이 같은 캠페인에 나서 활동영역을 확대함.

2016. 10. 5.

■ 현대판 노예노동하는 北 돌격대, 40만명 추산(연합뉴스)

- 북한의 국가 차원 노동조직인 돌격대가 ‘현대판 노예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들의

규모는 총 40만 명으로 추산된다는 주장이 5일 제기됨.

- 북한인권 시민단체인 ‘열린북한’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북한 강제노동실태 보고서 ‘거대한 노예노동 국가, 북한’을 공개함. 보고서는 돌격대 출신 4명 등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18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됨.
- 열린북한 권은경 대표는 “최근 국제사회에 충격을 준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실태는 북한 내 강제노동과 현금수탈 시스템이 해외에서도 그대로 자행된 결과”라며 “유엔 및 국제사회가 해외 파견 노동자뿐 아니라 북한 내 전 주민 대상의 강제노동과 일부 현대식 노예제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함.

■ 日외무성, 주중 북한대표부 간부 일본 망명 요청 없었다(연합뉴스)

- 일본 외무성은 5일 베이징 주재 북한 대표부 소속 고위 간부 2명이 지난달 말 가족과 함께 탈북해 일본에 망명 의사를 밝혔다는 한국 언론 보도를 부인함.
- 외무성은 해당 보도에 대한 연합뉴스의 확인 요청에 “일본으로 망명을 희망을 원하는 북한 사람이 주중 일본대사관에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일본 망명을 희망하는 북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고 밝힘.
- 교도통신도 주중 일본대사관 관계자가 “일본에 망명을 희망하는 북한인이 일본대사관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일본에 망명을 희망하는 북한인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 미 NGO, 북한 인권 개선에 탈북자 증언 중요(연합뉴스)

-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국제민주연구소’가 최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탈북자들의 증언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새로운 동영상 제작해 공개함.
- 국제민주연구소는 탈북자들이 북한 내부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국제사회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있다고 말함.
- 국제민주연구소는 이번 동영상이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의 기금 지원으로 제작됐다고 밝힘.

2016. 10. 6.

■ 美 민간단체 “北 영아 산모 사망률, 한국의 8배”(연합뉴스)

- 북한의 영아와 산모 사망률이 우리나라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 (VOA)방송이 6일 보도함.
- 미국의 민간단체인 인구문제연구소(PRB)는 최근 발표한 ‘2016 세계인구 통계 현황’

- 보고서에서 2015년 기준 만 1살 미만의 북한 영아 1천 명당 24명이 사망했다고 밝힘.
- 연구소 도시코 카네다 연구원은 VOA에 “1990년대 초 시작된 식량난으로 북한 주민들의 영양과 보건 상황이 악화해 기대수명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美하원 ‘북한인권법 5년 연장안’ 발의(연합뉴스)

- 미국 의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함.
- 5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에 따르면 일레나 로스-레티넨(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은 지난주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발의함.
-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세계 최초로 제정됨.

■ [단독]英정부 보고서에 ‘北 인권범죄 자행’ 적시…北 인권 압박(연합뉴스)

- 영국 정부가 공식 문서에 북한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도주의 범죄’가 존재하는 국가로 적시하는 등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이전보다 더욱 신랄하게 지적함.
- 영국 내무부가 5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정보(COI·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및 가이드스 : 북한’ 보고서는 2년 전인 2014년 11월 내용은 보고서와 비교해 일부 표현들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남.
- 이 보고서는 북한 주민에 대한 난민승인, 인도적 보호, 재량적 허가 등을 다루는 내무부 직원들에게 북한 인권 정보와 가이드를 제공한다고 소개돼 있음.

■ 독 NGO, 유엔 COI보고서 독일어 번역(자유아시아방송)

- 독일 최초의 북한인권 단체 ‘사람’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 요약본 독일어판을 완성해 7일부터 개최할 제2회 북한인권독일영화제에서 배포할 예정이라고 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사람’의 마르쿠스 릭싱어 씨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집대성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일반 독일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독일어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함. 배우이자 영어교사로 활동하면서도 틈나는 대로 우선 요약본 36쪽의 번역에 나선 이유임. 릭싱어 씨는 그러면서 2014년 우연히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Youtube)에서 ‘북한’ 관련 동영상을 찾아 보게 되면서 370여 쪽의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등 각종 북한 인권 관련 자료를 섭렵하고 ‘사람’의 일원이 되었다고 말함.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자체 웹사이트에 보고서 요약본을 아랍어, 중국어, 영어,

-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즉 에스빠냐어 등으로 번역해 소개하고 있음. 또한 한국어와 일본어 비공식 번역관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웹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음.
- 한편, 370여 쪽의 보고서는 유엔이 아닌 한국의 통일연구원이 번역한 한국어 판 등 비공식 번역본이 한국어와 일본어로 나와 있을 뿐 타 언어로는 번역되지 않은 상태임.

■ 미 의회보고서 “중국 내 북한인 노예노동”...북 해외노동자 인권 첫 언급(미국의소리)

-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중국위원회 CECC는 6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 혹은 노예 노동에 준하는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보고서들을 접했다”고 밝힘.
- 위원회는 북한 당국이 해외에 5만 명의 북한인들을 파견해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와 중국 내 북한인 근로자가 1만9천 명에 달한다는 한국 아산정책연구원의 발표를 인용함.
- 보고서는 또 중국 내 탈북자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통해 중국에서 강제결혼과 성매매의 희생물이 된다면,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중국에서 호적을 얻지 못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힘.

2016. 10. 7.

■ 탈북화가 송벽, 美의회서 北정권실상 비판 작품전시(연합뉴스)

-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북한의 인권탄압 실상을 풍자하는 그림을 전시했던 탈북자 출신 화가 송벽 씨가 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의회에서 작품을 선보임.
- 미국 국무부 주최로 워싱턴DC 레이번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전시회에는 북한 정권의 강압적인 통제나 북한 사람들의 생활 실상, 억압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북한 사람들을 주제로 한 송 작가의 그림 10여 점이 전시됨.
- 이날 전시회에는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방문해 송 작가를 치하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 특이사항 없음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6. 10. 3.

■ 북한인권법 시행 한 달…北인권재단은 출범도 못해(연합뉴스)

-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북한인권재단은 여야의 이사진 추천 지연으로 출범도 못 하고 있음.
- 통일부 당국자는 3일 “지난 8월 말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했는데 아직 여당과 야당 모두 추천하지 않아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힘.
- 당초 통일부는 9월 4일 북한인권법 시행 직후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한다는 목표로 서울 마포구에 재단 사무실을 마련하고 재단 직원도 선발했지만, 여야 이사 추천 지연으로 현판식조차 못하고 있음.

■ 통일부, 제3국 일시체류 北주민도 북한인권법 적용대상(연합뉴스)

- 해외과건 노동자처럼 제3국에 일시 체류하는 북한 주민도 북한인권법의 적용을 받게 됨.
- 통일부 당국자는 4일 “해외과건 노동자 등 제3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북한 주민도 북한인권법의 적용대상”이라며 “이들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와 인권 보호 활동도 가능 하다”고 밝힘.
- 앞서 서두현 북한인권기록센터장도 해외과건 북한 노동자 등 제3국 거주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 실태도 직간접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2016. 10. 5.

■ 靑, 北 간부 탈북 보도에 크게 주목한다(연합뉴스)

- 청와대는 5일 중국 베이징(北京) 주재 북한 대표부 소속 간부가 탈북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정권 내부의 최측근이 탈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주목하고 있다”고 밝힘.
-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보도에 대한 질문에 “관계부처에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함.
- 중앙일보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가족의 전용 의료시설인 평양 봉화진료소 등을 관장하는 보건성 1국 출신의 실세 간부 A씨 등 2명이 가족과 함께 동반 탈북해 일본으로 망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함.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남북자·국군포로

2016. 10. 5.

■ 대북소식통, 베이징 주재 北 대표부 간부 탈북(연합뉴스)

-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 대표부 소속 간부가 가족과 함께 탈북해 한국행을 타진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짐.
- 한 대북소식통은 5일 “지난달 하순 북한 보건성 출신 간부가 가족과 함께 탈북해 망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힘.
- 이 간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그 가족의 전용 의료시설인 평양 봉화진료소와 간부용 병원인 남산병원, 적십자병원을 담당하는 보건성 1국 출신으로 전해졌다. 베이징 북한 대표부에선 봉화진료소와 남산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의료장비와약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짐.

■ **2016 회계연도 미국 입국 탈북난민 14명...2006년 이후 총 200명(미국의소리)**

-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미국의 2016 회계연도 중에 14명의 탈북자가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됨.
- 미 국무부가 5일 공개한 난민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에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 3월과 8월에 각각 3명, 그리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2월에 각각 1명이었음.
- 성별로는 여성이 12명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남성은 2명에 불과함.

2016. 10. 7.

■ **아사히 “北日 당국자, 5차 핵실험 직전 중국서 납북일본인 논의”(연합뉴스)**

- 북한과 일본 당국자가 지난달 3~4일 중국 라오닝(遼寧)성 다롄(大連) 시내에서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7일 보도함.
- 일본 측에서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참사관 등 3명이 참석했으나 북한 측 참석자는 전해지지 않았음.
- 미일 관계 소식통은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일본은 미국 측에 대북 제재 강화에 전면 찬성하면서도 납치 문제를 중요성을 들어 ‘기회가 있으면 접촉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미국 측도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아사히에 전함.

5. 대북지원

2016. 10. 1.

■ **유엔, 대북수해지원금 추가 편성...총액 48억원(연합뉴스)**

- 최악의 홍수 피해를 당한 북한 함경북도에 대한 유엔의 긴급대응지원금이 총 48억

원 수준으로 늘어남.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 웹사이트에 따르면 CERF는 함경북도 수해 복구 지원에 410만 달러(45억 원 상당)를 투입하기로 한 지 하루 만인 9월29일 25만 달러(2억7천만 원)를 추가로 편성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보도함.
- 국제적십자사는 북한 조선적십자회와 협력해 수재민 3만여 명이 임시 거처에서 사용할 방수포와 이불, 조리기구, 세면도구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힘.

2016. 10. 4.

■ **민간단체, 北 수해지역에 구호물자 추가 지원(연합뉴스)**

- 국내 대북지원단체가 해외동포단체를 통해 수해가 발생한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 구호 물자를 추가로 지원한 것으로 4일 알려짐.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날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북 함경북도 지역 수해지원 긴급 모금 3차 소식’을 통해 “지난 9월 29일과 30일 수해피해를 본 살림집 복구를 위한 바닥 장판과 필수 의약품 등 약 8천만 원 상당의 물자를 함경북도 수해지역에 긴급 지원했다”고 밝힘.
- 이 단체는 “이번 물자 지원은 지난 9월 20일과 26일의 1·2차 지원에 뒤이은 것으로 바닥용 비닐 장판 3만5천㎡(약 700세대 지원용)와 이동용 지사제·감기약·해열제 등 3종의 필수 의약품으로 구성됐다”고 전함.

2016. 10. 5.

■ **덴마크, 북한 수해 복구 사업에 10만 달러 지원(미국의소리)**

- 덴마크 정부가 북한 수해 복구 사업에 1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함.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가 5일 공개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지난 29일 이 같은 지원을 결정함.
- 지원금은 덴마크 적십자사를 통해 국제적십자사의 대북 수해 복구 사업에 전달되며, 함경북도 수재민들에게 식량과 식수, 위생 지원을 하는 데 사용될 예정임.

2016. 10. 6.

■ **주북 아세안위원회, 홍수피해 지역 지원금 전달(연합뉴스)**

- 북한 주재 아세안위원회가 지난 8월 태풍 ‘라이언록’으로 홍수피해를 본 함경북도 지역

- 에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날 “지원금을 주조 아세안위원회를 대표하여 의장인 말레이시아대사가 리길성 외무성 부상에게 전달하였다”고 밝힘.
 - 전달식에는 주북한 아세안위원회 성원국들인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대사들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짐.

2016. 10. 7.

■ **스위스, 北 수해복구에 40억원 지원…단일국가 최대(연합뉴스)**

- 스위스 정부가 북한 수해복구 사업에 단일 국가로는 최대 규모인 365만 달러(약 40억원)를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7일 보도함.
-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처(SDC)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원금 규모는 유엔이 투입한 485만 달러의 3/4 수준이다. 이는 개별 국가로는 최대 규모임.
- 스위스의 지원금 가운데 190만 달러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전달되어 북한에 분유를 보내는 데 사용됨.